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임내현



지난주에 광복 61주년 기념일을 맞았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일본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이른 과거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감정적 요소의 개입으로 다소간 객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훨씬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왔는데 비해 그 때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크게 고무되었다.

이것이 일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 한국인의 자부심을 높이면서 대등한 자세로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속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친절, 질서, 청결 등 시민정신과 단결심을 보고 적지 않은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일본 놈, 왜놈, 쪽박이 등으로 비하하며 단점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좀 더 객관적으로 상대의 장단점을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그 후 온사마 배웅준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대표되는 일본 내 한류의 확산,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IT 산업체의 뛰어난 성과 등도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의 IT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력의 발전에 힘입어 그 시각이 변하고 있다.

거기에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향상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초에 발간된 뉴스위크지에 종래 한국을 얕잡아보고 싫어했던 일본인들이 한국을 존중하고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크게 실렸었다.

발전과 IMF 이후 금융개혁의 성과 및 한국인의 열정적인 행동양식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 태어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는 세대가 인구의 주류를 이루면서 상호인식에서 감정적 편견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중관계가 급속히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대미관계는 물론 대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것 같다. 또한, IMF위기 후 미국식 제도가 급속히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대미관계는 물론 대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것 같다. 또한, IMF위기 후 미국식 제도가 급속히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대미관계는 물론 대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것 같다.

물론 한·중 양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나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최근 동북아공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국가들에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미·일 삼국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는 우리의 안보에 중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예방하기 위해 긴요하다.

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 주장,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강행과 간헐적이지만 과거 식민통치와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망언들 및 꾸준한 군사력강화 등 우익 소비니즘적 경향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대일 무역적자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대하는 자세와 개인적으로 외국인에 대하는 자세에서 보이는 친절, 질서, 청결, 정직, 성실의 덕목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점유율이나 품질면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이 우리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대일무역적자가 막대한 주요 이유중 하나가 우리의 첨단기술제품제조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한 결과다.

또한 일본의 기초과학은 노벨상수상자가 전후 9명에 이를 정도로 충실하므로 우리는 일본의 강점을 신속히 배워야만 이를 따라잡고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다.

광복의 달을 맞아 단순히 반일감정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배울 것은 배움으로써 진정 이기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박덕희



모든 사회 현상에 경제논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사회가 됐다.

난감하기 그지없다. 이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변호사 사무장이 총대를 메기도 한다.

작은 정부의 추구, 규제완화, 효율성의 중시 등으로 인해 경제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다.

변호사가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생존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변호사를 경제논리로 내모는 것은 반드시 사회에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앞세운 공약이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부흥과 같은 경제 공약이었다.

변호사가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변호사가 수입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당한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

‘경제적 동물(homo economicus)’이라는 인간의 본성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경제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문제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승소가 틀림없다고 장담하면서 무리하게 수입하거나,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적 제도이기도

변호사제도 개선 ‘경제논리’ 안된다

하지만, 스스로 생존해야하는 경제활동 단위가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변호사 숫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부담재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도 경제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변호사 개업 동기부터 경제논리가 작용한다. 관사, 검사 혹은 다른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경제논리라면 움직인다면, 의뢰인이나 일반 사회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야 존립이 가능하다. 수임계약의 본질은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 의뢰인의 보수(수입료) 지급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이 사건 의뢰는 곧 ‘변호사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 의뢰는 곧 변호사에 대한 매매계약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재원조달 문제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법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있다.

변호사제도에 대한 매매계약인 셈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경제적 거래는 선인료 징출에서 절정을 이룬다.

변호사 제도를 경제적 관념의 틀에서만 파악해서 안 될 것이다.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밀고 당기는 절충이 이루어진다.

사물의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율리현상에서 벗어나, 변호사 제도를 둘러싼 법논리와 경제논리의 합리적 조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노인들이 많은 시골 자치단체에서 삼이나 낫, 팥이 같은 농기구에 야광밴드를 부착

시켜주면 좋겠다. 예산이 안된다면 판매하는 것도 괜찮다.

경찰서측에서 경운기 뒤에 야광 표식을 달아줬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본 것 같은데, 농기구에 부착하는 것도 야광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정경안·광주시 북구 누문동

<변호사>

기고

정훈아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를 현재 월소득액의 12~13%까지 인상하되 연금급여율은 40%까지 낮추고,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월 8만 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친근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연금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본격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이를 위해 정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야 한다. 또 국민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금 대화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연금제도 개혁은 국가적 과제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도개혁의 강한 의지표현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3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혁논의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현 세대의 가입자는 저부담-고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후세대들은 본인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절충안은 기존의 정부안과는 달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최대한 근접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현 시대의 국민적 과제이니 만큼 제도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재원조달 문제로 난색을 표명했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마저도 일부 수용한 것은 다각도로 연금개혁 방안을 강구, 더 이상 제도개혁을 늦추지 않으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현 시대의 국민적 과제이니 만큼 제도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지급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7년께는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국민연금개혁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 그 다음해에는 총선으로 이어진다. 연금제도 개혁이 이전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전략으로 악용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또다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연금제도 개혁을 미뤄진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큰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익선지사장

국민연금개혁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 그 다음해에는 총선으로 이어진다. 연금제도 개혁이 이전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전략으로 악용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또다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연금제도 개혁을 미뤄진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큰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익선지사장

자녀들 데리고 갈만한 주말 프로그램 있으면

매주 주말이면 ‘어디로 가야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데리고 갈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역이나 나들이를 한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다.

주 5일제가 된 뒤로, 아이들이 커 갈수록 매번 주말을 무엇으로 채워줘야 할 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맹목에 그늘 한 점 없는 동물원에 가거나, 깜짝 놀랄 만한 수도권 놀이 시설을 상상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패밀리 랜드의 오락면 놀이 시설을 타러 갈 수도 없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아, 나는 주말에 ~했다’며 주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마음에 걸린다. 저렴한 나들이 아니면 질 좋은 휴식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보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불거리가 너무 많다.

▲정경안·광주시 북구 누문동

▲조기형·광주시 북구 문흥동

시설

‘바다이야기’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하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론 인사의 연루설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하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론 인사의 연루설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도 최근 “내 집권기에 생긴 문제는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증거다.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만큼 ‘도박광화국’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현실에서 각종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파헤칠 의무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참여정부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 ‘대통령 조카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방침을 밝혔다. 의혹투성이인 ‘바다이야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만큼 ‘도박광화국’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현실에서 각종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파헤칠 의무가 있다.

의혹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와 감시를 지시한

양질의 일자리 대폭 감소...앞날이 걱정이다

양질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회사의 일자리 수가 7년 새 무려 27만4천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괜찮은 일자리’가 모두 14만개로 2004년 30만개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면 젊은이들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스럽다.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공기업, 금융회사 등의 종업원 수가 1997년 157만9천명에서 2004년 130만5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괜찮은 일자리’가 매년 4만개 정도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선 매년 쏟아지는 53만명의 대학졸업자(전문대 포함)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좌절할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 죽어 사자 매달리는 기이한 현상도 결국 관공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고용 창출은 낮은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위주로 이뤄져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26.8%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그런데 요즘처럼 투자전망이 어둡고 온갖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는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양질의 일자리가 귀해지는 추세를 방지하려면 국민의 체감경기는 회복되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인이 신바람을 내 기업할 마음이 생기도록 기를 북돋아줘야 한다는 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귀해지는 추세를 방지하려면 국민의 체감경기는 회복되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인이 신바람을 내 기업할 마음이 생기도록 기를 북돋아줘야 한다는 말이다.

無等鼓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가 놀음을 모두 때려 죽이는 일이다.” (‘헨리 6세’ 제2부 4막 2장)

다. “이제 변호사들이 들어서 모든 교수대의 오랏줄을 끊고 감옥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변호사가 명예를 걸고 구해낸 생명들이 법정 밖에서 조롱의 웃음을 웃고 있다.” (‘웃어 넘길수 없는 일들’ 중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법률가들이 대중의 환영을 받은 때는 별로 없었다. 그 자신 송사자가 많이 휘말렸던 셰익스피어는 작품 속에서 법률가를 향해 이런 독설을 날렸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법률 지식 만큼은 법관이었다. 오죽했으면 셰익스피어는 가공의 인물이고 실제 작가는 당대의 지식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법률가에 대한 비난 수준을 넘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출범과 함께 법률의 종언을 예언했다. 명문 카잔대학 법

‘헨리’에 나오는 오파리아의 자살과 아버지 살해에 따른 복수의 합법성, ‘리처드 3세’의 왕위계승 이론, ‘베니스의 상인’에서

대 출신인 레닌은 마르크스의 후에답게 빠른 변호사 경력동안 수임한 소송에서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무시무시한 스탈린 시대에도 인기 직종으로 살아남았다.

23일 퇴임하는 이의 인유 계약과 계약에 따른 채권 행사

23일 퇴임하는 이의 인유 계약과 계약에 따른 채권 행사

의 한계, ‘눈에는 눈’과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혼인 계약과 여성의 재산권 등 셰익스피어는 작품 곳곳에서 법률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23일 퇴임하는 이의 인유 계약과 계약에 따른 채권 행사

마크 트웨인 또한 배심제도와 ‘심신 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석방 등 19세기 미국의 법률 체계를 통렬하게 비판했

23일 퇴임하는 이의 인유 계약과 계약에 따른 채권 행사

마크 트웨인 또한 배심제도와 ‘심신 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석방 등 19세기 미국의 법률 체계를 통렬하게 비판했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孝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7-9500)
경 처 부 2200-616 여론채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주요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